

민주당 청년희망대화(2), '학자금 지원법' 처리 공감

- 17일 국회 교육위에서 '학자금지원법'(「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대학생 및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음.
-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서동용 교육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최명석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정두호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참여했음.
- 임은희 연구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매학기 학자금 대출(평균액)을 받고 휴학과 취업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등록금 상환을 개시할 때는 이미 2백만원이 넘게 쌓인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 문제는 무분별한 대출 결과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학비 부담과 심화되는 청년 실업이 빚어낸 결과인 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민지 집행위원장은 “청년들은 학자금 상환 부담과 생계 불안 등으로 인해 식비를 줄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을 정도”라며 “정부 차원의 예산 확충을 통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학자금 및 전세금 등 다중채무 양상을 띠는 청년 세대 평균 채무가 9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단절시기에 1.7%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과연 공정으로 인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음.
-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육위 안전조정위원회에 묶여 있는 ‘학자금지원법’(「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소득 단절시기 이자 면제에 그치지 않고, 초저리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록금 경감 등 단계적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2023. 4. 17.(월)